

면담 요청서

수 신 : 대통령 윤석열

참 조 : 비서실장 김대기,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발 신 :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등 28개 한·미·캐나다 NGO

제 목 :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 등 촉구 면담요청

1.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2.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10월 9일 저녁 8시경 훈춘, 투먼, 창파이, 난핑, 단둥을 통해 공안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김철옥(40세), 이순금(42세) 등 600여명의 탈북민들을 기습 복송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90% 이상이 여성이고, 어린아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그동안 구금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북중국경이 폐쇄되어 복송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2,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3.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은 20년 이상 된 악행이지만 이번처럼 대량 복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항상 탈북민들은 불법 월경자이고, 그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송된 탈북민들은 고문, 정치범수용소, 처형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고, 2014년 이후 인권침해는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복송하여 고문과 폭력, 처형 등을 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살인 방조입니다. UN CO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재중 탈북민들은 최소한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합니다.
4. 중국은 UN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모두 가입 비준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국의 특권을 누리자마자 파렴치하게 탈북민들을 강제복송한 것은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자격은커녕 회원자격도 없습니다.
5.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대해 공개적 명시적으로 탈

북민 강제복송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엄청난 수의 탈북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대량 강제복송 만행은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인질 납치사건 못지않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이지만 아직 세계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28개 한미 NGO(캐나다 단체 추가)는 13일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면서, 나아가 획기적인 탈북민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하오니 수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윤 대통령님의 면담은 대중 인권외교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6.

첨부서류 :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촉구요청 서한

Human Rights Foundation (HRF),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FSI), Liberty in North Korea (LiNK), 국민통일방송, 국제PEN망명북한PEN센터, 물망초,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NANK),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사)겨레얼통일연대, (사)북한인권, (사)환태평양문화연구원,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이음연구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전국탈북민연합회, 통일사랑교육협의회, 통일이카데미, 통일준비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